

< 공동 입장문 전문 >

존경하는 국민과 시·도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방은 소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것을 환영하고 지지합니다.

대구·경북은 2020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통합 논의를 시작해 왔습니다.

대구·경북의 동참이 있어야 국가적인 행정통합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통합의 필요성과 방향을 정립해왔고, 중단 없이 논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의 통합의 비전과 방안, 각종 특례 구상은 충청·호남에 그대로 이어져 혁신적 통합의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경상북도와 대구시는 통합의 추진 여부와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했습니다.

그 결과, 통합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동의, 확인하고 대전·충남, 광주·전남과 연계한 통합 절차를 본격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먼저 도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통합 추진을 위한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겠습니다.

동시에 시·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향후 통합 절차를
신속하고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통합의 방향과 지원 내용은
대구·경북이 함께 준비해 온 구상과 큰 틀에서 일치하고,
통합에 대한 큰 희망과 기대에도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이 진정으로 성공하려면, 국가 차원에서 경북 북부지역 등
낙후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마련되고,
중앙정부의 과감한 권한이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통합특별시는 경제·산업 육성, 균형발전·광역행정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고,
시·군·구의 권한과 자율성 확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도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과 대구·경북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대구·경북이 먼저 준비해 온 만큼,
국가적인 대통합의 역사에 당당히 앞장서겠습니다.

시·군·구, 시·군·구의회, 시·도의회, 그리고 시·도민과 함께
대구·경북의 미래를 바꾸는 역사로 만들어가겠습니다.